

# 이재명, 전북 경선서 70%대 득표

민주 전대 도내 권당 투표서 76.81% 기록  
박용진 대표 후보는 23.19% 득표율에 그쳐  
최고위원은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순  
지난 17일 권당 온라인투표서 전북은 17.20%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대전' 첫 날인 지난 20일 전북 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70%대의 득표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후 발표된 전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6.81%(4만234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23.19%(1만 248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78.05%(12만9034표), 박 후보 21.95%(3만6288표)로 격차가 4배 가까이 됐다. 이 후보는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우리 전북의 당원·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언제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남은 일정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호남이 전체적으로 그렇고 오늘 전북도 최종 투표율이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많이 아쉽고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실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다.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후보 사퇴로) 일대일 구도가 되고 호남에 들어오면 변화가 있을 것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투

표율이 너무 낮아서 변화의 진폭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체념 같은 분위기가 지루 느껴져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서울과 경기에서 권리당원들의 투표 참여와 당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마음들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 지역 권리당원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6.72%(2만887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민정 후보가 25.91%(2만782표)로 2위였다. 이어 서영교 후보 12.34%(1만325표), 장경태 후보 10.60%(1만1380표), 박찬태 후보 8.82%(9466표), 윤영찬 후보 7.31%(7846표), 송갑석 후보 5.82%(6248표), 고영인 후보 2.48%(2633표) 등의 순이었다. 이로써 누적 득표를 기준으로 정청래 후보가 27.76%(9만6319표)로 1위를 유지했으며 고민정 후보 역시 23.29%(8만1807표)로 2위를 지켰다. 서영교 후보가 11.46%(3만9788표)로 3위에 올라섰으며 장경태 후보와 박찬태 후보가 각각 11.21%(3만8885표), 10.10%(3만1507표)로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다. 이어 윤영찬 후보 7.60%(2만6364표), 송갑석 후보 4.67%(1만6193표), 고영인 후보 3.92%(1만3613표) 등의 순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마감한 결과 지난 17일 투표를 실시한 전북은 17.20%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전북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북도당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왼쪽)이 전임 김성주 위원장(오른쪽, 전주병)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승리하는 당 만들자”

민주 한병도 의원,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신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1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북도당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라북도당위원장 선출의 건'을 통해 한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전북의 발전과 당의 혁신의 길에 앞장서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하며 "도당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께 드리는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부에 충실한 도당 만들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새만금 개발, 공공역대 설립 등 산적한 전북 현안 조속히 추진 △

전북 정치적 복원을 위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 △기부와 원칙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한번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승리하는 도당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직후부터, 차기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까지이다. 한병도 위원장은 제17대, 21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전북도당을 이끌어 온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전북도당을 위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한병도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

## 도의회, 수소 상용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국주영은 의장 등 도의원 4명  
현대차 전주공장 찾아 간담회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원주지역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은 지난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최준혁 공장장은 "수소 트럭과 버스 양산설비가 갖춰진 곳은 전주공장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면서 "특히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 이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 수출도 예정돼 있다"고 수소차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주공장의 미래는 수소 상용차 산업 활성화 여부가 관건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에서 물량 확보나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앞장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의장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차 생산 현황을 직접 살펴보니 수소 상용차 시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원주지역 권요안·윤수봉 도의원은 지난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노후 차량 교체시 친환경 차량 구매 등 도의회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소차가 확대되면서 충전소는 물론 수소 공급량 부족 경차량 구매 등 도의회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반 구축사업 신속 추진 등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김제1)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현대차 등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친환경차라고 권장하면서도 수소 공급대책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소 산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위한 의정활동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도 "현대차 전주공장이 국내를 넘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이 협력하겠다"며 "아울러 노후 차량 지원과 함께 도내 시군은 물론 공공분야부터 수소차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북 녹색전환 11대 정책 맞춘 민선 8기 과제 발굴

도의회, 정책토론회 열어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유혜숙), 녹색전환연구소(이사장 김지영)가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우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의 '도민과 함께 만든 전라북도 녹색전환 11대 정책' 발표에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가 민선 8기 전북도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정책분석'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은 광동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권요안 의원과 함께 도내 시군은 물론 공공분야부터 수소차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유혜숙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최근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침수피해를 보는 등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책화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라북도다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주영은 도의장은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있는 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호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단적인 사례"라면서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이라는 정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관행농업서 정밀농업으로 전환... 탄소중립 실현”

권요안 도의원, "저탄소 구조로 전환 위해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센터 설립" 제안



이를 위해 권 의원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연구할 '농업농촌 탄소중립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로컬푸드 확대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식품 수입량이 많아 수입거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에도 주목했다. 숲이 탄소흡수는 물론 탄소를 장기간 저장, 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권 의원은 "숲가꾸기, 도시숲 조

성 등의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산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선 8기 도정목표에 기후예산 항목이나 탄소인지예산제가 누락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흡해 보인다"라고 꼬집으며 전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생태문명 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의회와 녹색전환연구소,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북도 녹색전환 11대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수 기자

## 文 사저 경호 확대 300m 내 시위금지

尹, 김진표 국회의장 건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에 확장 재지정해 경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사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에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미터까지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여서 각종 집회 시위가 사저 바로 앞에서 벌어졌다. 경호처는 "이같은 조치는 평안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안 마을 주민들도 고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시각부터 대통령령으로 경호구역 확장과 더불어 경호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민찬에서 김진표 의장이 경호 강화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 이후 향후 야당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뉴스